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6·2 지방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지지율이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막강한 여당에 의해 지배되었던 중앙과 지방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상호 공존 또는 대립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갈등은 만만치 않게 풍족될 전망이다. 애당은 당장 내각총사퇴 요구와 함께 정권의 핵심 정책에 대해 더욱 강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애권과 함께 여권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인적쇄신론과 국정 운영 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죽어가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6월 국회에서부터 철회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기조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떠나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의 친이계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인